

2019년도 1학기 한국과 세계 기말고사 시험문제 예제

※ 사실기술형은 각 배점 10점, 서술형은 각 배점 20점입니다.
※ 2장 이상의 답안을 쓸 때에는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각각 써야 합니다.

● 사실기술형 문제

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가 1997년 일본법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적 쟁송의 과정에 대해 정리하시오.

1997년, 여운택씨 등 4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 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1년,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는 '소송은 일본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고, 그 다음해 일본 최고 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1심), 서울고법(2심),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배상금이 지급됐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에서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권협정만으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가해자인 일본기업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라며 배상 청구권 인정 판결을 내렸다.

2013년,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했다.

이후 여운택씨 사망 후 5년동안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다가 2018년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재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청구권협정이라고도 하며 조약 172호에 해당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미화 3억 달러의 가치를 무상으로 제공

b) 미화 2억 달러와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10년동안 장기 차관으로 제공

제2조 1. 양 체결국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

해당 내용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돈을 제공하고 차관을 주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래 국제적 관계에서 배상청구권이라 함은 가해국이 피해자/피해국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다. 일본 측은 일본이 준 돈은 청구권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청구권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012년 대법원은, 협정의 제목은 청구권인데, 저 돈을 제공하는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협정문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급했던 돈이 청구권에 대한 배상금인지 알 수 없고, 한국인이 일본 기업에 당한 피해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3)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7개 항이 있으며, 1항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합의하였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분단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합의한 평화 통일 원칙이다. 남한은 미국의 압박(미국의 전략에 사실상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중국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공동성명이라 하더라도,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걸 명시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무력'이 아닌 '평화'통일을 정부 수준의 공식 언어로 명시한 것도 중요하다. 또한 '하나의 민족'임을 명시함으로써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이후 진행된 남북회담의 바탕이 되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당국자들간의 비밀회담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세 의존적이고 대결지향적인 통일노선을 거부하고 올바른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냈다는 의의가 있다.

4) 대한민국 정부가 '7.4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게 된 국제정치적 배경을 설명하시오.

공산 진영은 1960년대 후반 분열이 초래되었고, 자유주의 진영은 닉슨 독트린으로 위기감이 들었다.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은 미군에 기대었던 안보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미군의 부분 철수, 미중의 화해 무드로 남북은 변화하는 국제 정치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박정희가 이끌던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위기도 있었다.

다극화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미국은 소련·중국과 화해를 추구하게 되었다.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박정희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설득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소, 중과의 긴장완화와 관계 개선은 냉전체제 형성 이후 최초의 탈냉전 노력이었다. 그리고 한반도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 변화에 예외일 수 없었기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감행하였다.

1971년부터 예비접촉을 시작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게 된다.

5) 1988년 13대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서부터 2011년 5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까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보시오.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에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되고, 시민 300여명은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하였다. 이에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나머지 피고소인에게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95년, '공소권'이 있게 만들자는 목적으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격렬한 여론에, 그 해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96년, 대법원 판결로 전두환, 노태우 및 당시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97년에는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2001년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활동들과 노력이 인정되어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6)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는 정치, 사회적 갈등을 빚어오다가 1979년에 한계에 이르렀다. 민주화 시위가 활발해지면서 당시 민주 인사들에 대한 연행과 투옥 등 탄압 강도가 강화됐지만 저항은 고조되었다. 더불어 1970년대 말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는 중소기업 및 농민 등에게 비용을 부과하였다. 이에 기업의 부도율이 치솟고 가뜩이나 어려운 하층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졌다. 이런 정치, 경제적 모순이 모여 당시 제조업이 집중됐던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이후 시위가 크게 커지자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부마민주항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단시간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직후 1주일도 안 되어 10·26사건이 발발하였고, 유신체제도 종언을 맞이했다.

7)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시오.

서문: 남북관계... '통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정의

9조: '쌍방이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상호 불가침 합의)

10조: '의견대립과 분쟁문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

12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단계적 군축...협의 추진'

13조: 직통 전화 설치 합의

8)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시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을 금지
-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 핵통제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UN동시가입 추진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추진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1991년 북한은 UN에 가입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주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별도로 북한은 영변 등에서 핵재처리 시설을 은밀히 가동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과 핵사찰을 지연시켜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한반도 핵부재 선언>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마무리 조치로 북한에 요구하여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시켰다.

9) 'IMF외환위기' 당시 IMF가 한국에 요구했던 'IMF Conditionality'의 내용을 정리하시오.

IMF는 1997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총 9번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했다.

- 1)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재정의 재정적자를 GDP의 5% 이내로 제한
- 2) 고금리 정책을 적용하여 최초 25%까지 요구, 점차 하락
- 3) 주식시장 개방: 외국인 주식한도였던 28% → 55%
외국인 개별한도 7% → 50%
- 4) 금융기관 소유 개방 :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허용
- 5) 외국인의 증권회사설립 허용
- 6)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변화

위의 구제금융 조건 중에서 2)의 고금리 조건으로 시장 경제가 비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1)의 조건은 외환위기 당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요한데 1)의 조건으로 인해 적자재정의 편성이 제한됐다. 3)을 통해 국내기업의 경영권 강화가 어려워졌다. 3), 4), 5)는 한국의 금융 기관의 투명성의 확보와 외국 금융계와의 경쟁구도를 통한 발전을 의도로 제안된 조건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6)의 조건은 역으로 불한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했다.

10) '발전국가모델의 내재적 한계론'의 관점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발발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시장 미발달로 시장경제로만 산업화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발전국가모델을 채택하였고, 시장경제가 발달하면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이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부족한 건 맞는데, 그 이유는 총체적으로 운영을 잘못하였기 때문이어서 아예 시장 구조를 restructuring 해야 한다고 본다. 직접적 원인은 유동성 위기(달러 미스매치)지만, 재벌의 과잉중복투자와 금융취약성이라는 내재적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 본다.

이는 IMF 및 미국이 취했던 입장이다.

● 서술형 문제

1)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입장을 나누어 설명해 보시오.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당시 박정희는 승인 없이 군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군법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대상이었다. 케네디 정부는 계속 박정희 정권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에 박정희는 미국 측에 한일수교를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미국으로부터 쿠데타 정부의 정당성을 승인 받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일수교협정을 맺기로 한 것이다.

이후 박정희-이케다(수상)회담이 진행되고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오히라 2차 회담이 진행된다. 이때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1964년에 공개가 되며 한일회담반대투쟁의 시작이 되었다. 반대투쟁이 계속 진행이 되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이후 제7차 한-일 회담에 이어 1965년 2월, 한-일 기본조약 가조인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었으니 한국 정부는 일본 및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여게 된다.

1차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던 시점까지, 가조인이 되는 날짜에 액수까지도 미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미국에게 한일협정은 중요했다.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을 따로 구성하는 게 비효율적이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미군을 움직이는 등의 일을 하려면 한일 수교가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2)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서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정리하시오.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 선포 이후에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치를 계속해왔다. 이런 와중에 김영삼이 신민당 총재에 당선되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다. 이때 발언을 빌미로 10월 4일 공화당 주도로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한다. 그동안 유신체제에 대해 누적되었던 불만이 해당 사건으로 터지게 되었고 유신 체제에 대한 항쟁인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여 진압한다. 그러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커지게 되었으나,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난다. 이후 계엄령 하에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서울역**에 1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였지만, 군의 개입을 우려하여 **사태를 관망하는 의견이 우세하게 작용**했고 결국 **서울역 회군**을 통해 해산하였다. 그 후 신군부 주도하에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이루어지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과잉진압에 의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폭력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다. 유혈사태는 커져만 갔다. 결국 계엄군이 광주시 전역을 장악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 결과 수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한국정치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80년대 민주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광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5공화국 민주운동의 슬로건이 되었고 또한 지역적인 운동이 아닌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 더 강력하고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인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은 전국적인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4.13호헌조치 및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향을 줘 일어난다. 6월 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과 다르게 전국적인 시위였기 때문에 강제로 막기 힘들었다. 결국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된다. 이는 1987년 12월 헌법 개정과 대통령 직접 선거로 이어졌다.

3)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IMF의 위기진단 및 처방을 정리하고, '김영삼 정부의 정책실패론'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해보시오.

IMF은 우리나라가 아직 시작 형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산업화를 할 때 자유경쟁만으로는 산업형성이 어렵고, 또한 많이 성장한 대기업이 사고가 나면 스스로 투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대기업의 고용인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라 진단했다. 이에 주식시장 개방, 고금리정책, 긴축재정, 기업 구조조정 등의 처방을 내렸다.

한편 김영삼 정부의 정책실패론은 'IMF외환위기'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김영삼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으로 본다.

1) OECD 가입을 위해 무리하게 시장 자유화 일정을 앞당긴 점 :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무리하게 단축했다. 결국 시장 개방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계 시장의 흐름에 맞는 시장개방정책을 구축하지 못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IMF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미국과 IMF에 의해 이러한 계획들은 더 앞당겨져서 실행되게 되었다.

2) 정부차원에서 금융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제도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개방한 점 : 1)로 인해 막대한 자본이 급속하게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었으나 허술한 금융 감독 장치로 인해서 기업들의 외화 사용 내역 파악이 어려웠다.

3) 이전처럼 미국과 일본이 돈을 빌려줄 것이라 생각하는 국제 경제 질서의 흐름에 대해 오만한 점. : 1)과 2)와 같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닥치게 되었고 극복하지 못했다. 그 전에 국제적으로 이미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오판을 한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 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개발국가모델에서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이행이 가져올 위험(시장 구조가 바뀌면 모두가 영향을 받고, 약자층부터 다칠 수밖에 없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장자유화가 필요한건 생각을 했는데, step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 기업들이 단기외채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결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금융위기 일어났다는 관점이다.

4) 국제정치적 환경과 한국정부의 리더십 측면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 ‘북방정책’과 한반도 정책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북방 정책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수립한 대한민국의 대공 정책이다. 기존의 적대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군사적인 대결이 완화되었다. 소련과 중국은 대한관계 개선을 원하였다. 북방정책에 따라 헝가리, 소련/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정부는 ‘7.7선언’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7월 5일 미 대사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유(리더십 요소)에는 우선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노력에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사회주의적 국가들의 올림픽 참여 유도를 노력했다. 노태우는 1988년 취임사에서 ‘북방에의 외교적 통로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당사자 주도 원칙’을 주장하며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한다 하며 미국 측의 6자 회담 제안도 거부하였다.

이에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선회’라 입장을 표명하였다.